



주간통일정세 2011-30(2011.07.18 ~ 07.2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1-30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 '생일상'도 김정일식 충성 유도 통치수단(7/19,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행위를 특징짓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덕정치'로 이 용어는 1993년 1월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처음 제시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인덕정치를 통해 김 위원장은 간부와 주민으로부터 더 확고한 충성을 확약 받고, 간부와 주민은 김 위원장이 펼치는 인덕정치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1인 독재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것인데, 김 위원장이 행하는 인덕정치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주요 간부에게 선물을 주는 이른바 '선물정치'임.
- 선물정치가 김 위원장이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인덕정치의 대표적 사례라면 '생일상'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대표적 인덕정치임.
-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100세를 맞은 노인에게 대통령과 여왕 또는 총리가 축하 편지와 함께 선물을 보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100세를 맞은 주민에게 보내는 생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에서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이 보내는 생일상에 포함된 음식과 옷 등은 일반 주민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고 뉴스는 전함.

##### ● 北, 권혁봉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김일성 훈장'(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권혁봉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게 북한 최고 영예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중앙통신은 "그는 문학예술분야에서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는 사상에 숭성이 완벽한 시대적 명작이 훌륭히 창조되게 함으로써 당원들과 인민군 군인,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해 주체혁명위업 완성으로 불러일으키는데 공헌했다"고 밝힘.
- 권 부부장은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장과 내각의 문화예술부 부부장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권 부부장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선전선동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北-몽골 외교장관회담 개최(7/19, 조선중앙통신)**

- 몽골을 방문 중인 박의춘 외무상이 18일 금보자브 진단사타르 몽골 외교장관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 정세를 통보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北매체들 지방선거 분위기 띄우기 분주(7/20, 조선신보)**

- 20일 오전에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비롯해 대남 선전 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북한의 거의 모든 매체가 6건의 관련 보도를 쏟아내 선거가 가까워졌음을 실감케 함.
- 조선신보는 이날 "선거 참가에 대한 선전물이 시내 곳곳에 나붙고 중요 신문에 선거 준비와 참가에 대한 기사들이 실리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 맞춰 방송선전 차량이 돌아다니며 선전을 벌이고, TV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선거 선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함.

● **김정일·정은, 北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7/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공연 관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이 함께 함.

● **김정일·정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현지지도(7/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중앙통신은 김정은 외에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김평해 당비서가 수행했다고 밝힘.

● **北도 아세안에 주재대사 파견 결정(7/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주재대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을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아세안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아세안 주재대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사이의 호상신뢰와 호혜협조를 더욱 심화발전 시켜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남북외교장관 ARF서 접촉..후속대화 협의(7/23, 연합뉴스)

- 남과 북이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23일 외교장관 간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23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도중 비공식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현지시각) 회의시작 전 대기장에서 만나 22일 있었던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짐.
- 이런 가운데 남과 북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접근방안의 첫 단계인 남북 비핵화 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후속 대화의 방향과 수순을 놓고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으며, 김성환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낮 국제회의장(BICC)에서 오찬을 겸한 3자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방향을 논의
- 앞서 김 장관과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전 화동해 전날 개최된 남북 비핵화 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남북대화과 북미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이날 오전 ARF 회의가 열리는 도중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북·중 고위급 회동을 했으며, 리 부상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과도 만남.

#### ● 北 "중, 리대표와 회동"...'남접촉' 보도 안 해(7/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 러시아 대표와 회동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통신은 "조선대표단 단장인 박 외무상이 22일 중국대표단 단장인 양결지(楊潔志<兼대신虎들어간簾>, 양제츠) 외교부장,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상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보도



- 또 여기에는 리용호 외무성 부상, 리정률 인도네시아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장조리, 중국특명전권대사,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 등이 참가했다고 전함.
  - 그러나 이번 ARF회의에서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부상이 공식 회동한 사실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외무상이 접촉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박의춘 "北 비핵화 추진은 일관된 입장"(7/24, 연합뉴스)**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연설에서 "대화과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박 외무상은 전날 ARF 연설을 통해 "정세의 완화나 긴장격화의 악순환이나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조선반도의 현 상황은 대화의 기회를 틀어쥐고 대담하게 근원적인 문제에 손을 대는 용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박 외무상은 또 "핵문제나 주기적으로 폭발점에 이르는 정세와 같이 긴장격화가 지속되고 있는 근저에는 불신과 대결을 낳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놓여 있다"고 문제의 원인을 미국에 돌림.
- **北 지방인민회의 선거…김정일·정은 투표(7/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대동하고 제264호구 제150호분구 선거장에서 평양시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평양곡산공장 지배인 박형렬과 용성구역 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용성메추리공장 지배인 강철호에게 투표
  -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인민의 대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라"고 격려
- **北 지방선거 완료…"투표율 99.97%"(7/24, 조선중앙통신)**
- 24일 북한의 각급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2만8천여 명을 뽑는 대의원 선거가 투표율 99.97%(오후 6시 기준)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의 중앙선거지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선거는 3시간 만인 정오에 84.66%, 오후 2시 97.58%의 투표율을 나타내



며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오후 6시에는 선거인 중 99.97%가 투표를 마칩.

- 북한은 이번 선거를 통해 남한의 각급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지방주권 기관인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의 대의원 2만8천 명 가량을 뽑음.

■ 기타 (대내 정치)

- 北 노동신문 대표단(‘김원석’ 부주필), 7.19 ‘딩 테 후잉’ 베트남 黨비서 겸 선전교육부장과 담화(7/20, 중통)
- 北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사업’, 7.20까지 완료(7/21, 중통)
  - 각급 선거위원회들에서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를 선거구, 분구들에 공시하고 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 마감단계에서 추진 중.

나. 경제

● 민화협, 밀가루 1천t 대북지원 승인신청(7/18,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밀가루 1천35t과 분유 2t 등 총 3억4천만 원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12일 승인 신청서를 냈다고 통일부가 18일 밝힘.
- 통일부에 따르면 민화협은 21일에는 밀가루 1천t을 사리원 지역의 취약 계층에, 23일에는 밀가루 35t과 분유 2t을 평안남도 지역의 유치원, 탁아소 등에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정부 '대북 밀가루 지원' 9개월 만에 승인 가닥(7/19, 연합뉴스)

- 정부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민간단체들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밀가루는 군 식량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개연성 때문에 정부가 지원에 부담을 느껴온 품목이어서 밀가루 지원이 재개되면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
- 정부 당국자는 19일 일부 민간단체의 밀가루 대북지원 추진과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밀가루를 금지한 적은 없다"며 "다만 지원된 밀가루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함.
- 이달 21일과 23일 밀가루 1천35t과 분유 2t 등 총 3억4천만 원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12일 승인 신청서를 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정부가) 벌써 안 된다고 했다. 이번에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함.



- **국제적십자사 "수해지원 北요청 받은바 없어"(7/19,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IFRC)는 18일 "북한으로부터 폭우 피해 규모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IFRC는 "북한이 조선적십자사를 통해 수해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은 북한이 직접 수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듯 하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 **"유니세프, 北수해 실사단 파견 준비"(7/20, 미국의소리(VOA))**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북한이 수해지원을 요청하면 수해지역에 파견할 실사단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 UNICEF는 방송에 "북한이 아직 수해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평가를 나가지 않았고 긴급 구호품도 분배하지 않았다"며 "지원을 요청해온다면 즉각적인 수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힘.
  - UNICEF는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비해 비타민보충제·방수포·텐트·식수정화제 등 주민 10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 구호품을 북한 전역에 비치하고 있고, 현장 조사단은 이 기구의 평양사무소 국제요원으로 구성된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집중호우로 탄광들 큰 피해"(7/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12~15일 내린 집중호우로 각지 탄광에서 큰 피해를 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서부지구의 30여개 탄광들에서 수십 개의 갱과 150여 개의 채탄장이 침수됐고 40여 개소의 저탄장들에서 수십만의 석탄이 유실됐다"고 밝힘.
  - 이어 "순천과 덕천, 북창 일대에서는 적지 않은 다리들이 끊어지고 철길로반(노반)들이 산사태로 파괴돼 교통이 마비됨으로써 석탄수송에 난관이 조성됐다"며 "함남, 천내지구의 탄광들에서도 많은 갱들과 채탄장들이 물에 잠겨 생산이 중단됐으며 전력사정으로 양수설비들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함.
  
- **WFP, 北수해지역 답사... "광범위한 피해 목격"(7/21,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수해지역인 강원도 원산과 함경남도 함흥을 최근 방문, 피해실태를 살폈다고 북한 관련 외신들이 21일 보도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WFP가 2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글을 인용해 "실사단은 원산과 함흥에서 광범위한 침수와 농경지 피해를 목격했고 강둑이 터져 많은 주민이 집을 버리고 피신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고 전함.



- 이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WFP는 북한의 홍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최대 37만5천명의 이재민에게 120일 동안 식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 상태"임.

● **원광대, 북한에 유아용 분유 전달(7/21, 연합뉴스)**

-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20일 북한 개성에서 유아용 분유 6천 캔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
- 이번에 전달한 분유는 북한의 유아 500명이 3개월간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이 분유는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영양결핍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전달될 예정

● **"北, 유엔 기구에 '경제교육' 요청"(7/21, 연합뉴스)**

- 북한이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유엔 기구에 경제 교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남상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환경담당관은 21일 오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의 평화나눔정책포럼에서 "북한이 최근 방콕 주재 북한대사를 통해 경제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고 말함.
- 남 담당관에 따르면 UNESCAP은 북한에서 에너지·환경과 수자원·교통·지역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북한은 이중 지역협력사업의 하나로 경제교육을 요청

● **"호주, 유엔 대북식량 지원에 524만 달러 지원"(7/22, 미국의소리(VOA))**

- 호주가 최근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식량 지원사업에 524만 달러(55억3천만 원)를 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
- 방송은 WFP의 최근 자금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호주가 기부한 자금은 WFP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북사업에 필요로 하는 예산 2억 달러(2천100억 원)의 2.6% 규모로 올해 개별국가로는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
- 방송은 "지금까지 호주 외에 스웨덴, 중국,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등 12개국이 WFP에 기부했지만 WFP가 확보한 자금은 필요한 예산의 21%인 4천485만 달러(470억 원)에 불과하다"고 전함.

● **"유엔개발계획, 北에 풍력발전 지원"(7/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개발계획(UNDP)은 올해 북한에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RFA는 "UNDP는 북한이 풍력에너지 장비를 자체 제작할 수 있게 하고 풍력에너지 전문가와 기술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함.
- UNDP 측은 이 방송에 "북한의 에너지 기술자 및 전문가를 중국, 필리핀, 인도 등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농촌 에너지 지원 사업'에 포함 된



다"고 밝힘.

● "북한에 희토류 2천만t 매장"(7/23, 조선신보)

- 반도체 등 첨단제품에 들어가는 희소자원 희토류가 북한에 2천만기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3일 보도
- 또한 희토류 최대 매장지역은 평안북도지만 강원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량강도 등 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황해북도에도 매장돼 있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전함.

● 北-中, 청진항도 공동개발 본격화(7/24,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황금평·나선 경제특구에 이어 최근에는 나선특구와 청진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등 청진항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4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공병대를 투입해 훈춘(琿春)~나선 간 도로에서 뺏어 나와 청진으로 향하는 약 15k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며, 청진항을 보수·확장하는 공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이번 개발에 들어가는 자재와 비용 등은 모두 중국이 부담한다"며 "청진항 개발에는 중국 다롄(大連)에 위치한 '해양어업집단공사'도 참여했다"고 밝힘.

● 中화룡-北혜산·평양 관광코스 신설(7/24, 길림신문)

- 북한과 중국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화룡(和龍)-북한 삼지연 관광코스를 혜산과 평양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길림신문이 2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화룡시는 북한 양강도와 현재 운영 중인 화룡-삼지연 관광코스를 혜산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13일 합의

● 北-中, 라선 농업시범구 조성 본격화(7/24, 연변일보)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조성키로 한 북한 라선특구 내 농업시범구 공사가 본격화됐다고 연변일보가 24일 보도
- 신문은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가 북한 라선시와 공동으로 라선특구 내에 건설키로 합의한 '중조(中朝) 합작 농업 시범구' 사업이 최근 비닐하우스 설치와 우물파기 등 기초 공사가 본격화되는 등 본 궤도에 올랐다고 전함.
- 라선 농업시범구 조성에는 최소 123만2천 위안(약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연변일보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라선경제무역지대'(6.9 朝-中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상 착공식 개최)는 "中-北 경제와 교통운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친선적 경제무역지대, 東北亞와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 선언 (7/20, 중통·노동신문)
- 北, '상표법'의 제1장(상표법의 기본)과 제5장(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수정 보충(7/20, 중통)
  - 경제가 발전하고 상품생산에 늘어나는데 맞게 상품의 질을 높이고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됨.

다. 군사

● "개도국에 팔린 탄도미사일 40%가 북한산"(7/21, 미국의소리(VOA))

- 지난 20년간 개발도상국에 수출된 미사일의 40% 정도가 북한산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미국 비확산관련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
- 미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국제대학원의 대량살상무기·비확산연구센터가 최근 발행한 '비확산지(The Nonproliferation Review)' 7월호에 실린 '탄도궤적: 북한 탄도미사일 시장의 진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중동,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수출된 탄도미사일 약 1천200기 가운데 510기(42.5%) 가량이 북한산임.
- 보고서를 작성한 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은 VOA에 "북한이 중동에 완성된 미사일을 대량으로 수출하던 전성기는 끝났다"며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자 중동에서 급격한 무기증강과 미사일 공급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과 경쟁하려는 중동 국가들에 우라늄 공급 및 변환기술, 농축장비 등을 판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 "北, 연평도 포격前 동창리서 미사일엔진 시험"(7/24, 연합뉴스)

- 북한이 작년 연평도 포격 도발 전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제2미사일기지에서 장거리미사일(ICBM급) 로켓엔진 성능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정부 고위 소식통은 24일 "북한은 작년 10월 말께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미사일 로켓 엔진 성능시험을 한 차례 실시했다"면서 "미국의 군사위성이 포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시험이 이뤄져 의도적으로 미사일 위협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 이어 소식통은 "지난 2001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대(높이 30여m)를 지지하는 발사 타워 공사는 완료됐지만 전체



기지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장마철 수해대책 만전" 캠페인(7/1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8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자면 장마철에도 생산을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자"고 독려
- 조선중앙TV는 특히 "장마철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문은 농업"이라며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배수양수장을 비롯한 고인물빼기 시설들을 언제든지 만가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이어 "물길과 저수지들에 대한 보강대책을 세우며 배수로와 물도랑을 잘 쳐서 토지와 농작물, 농업생산 시설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수지 수문조절과 배수양수장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절대 중단하지 않도록 하자"고 촉구
- 아울러 조선중앙TV는 해일 피해, 탄광 침수, 산사태에 의한 철도 시설물 피해, 화력발전소 내 석탄 유실,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줄 것을 당부

● **"英, 북한내 영어교육 3개 대서 6개 대로 확대"(7/19,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정부는 북한에 제공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양국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전함.
- VOA에 따르면 데이비드 하웰 영국 외무차관은 지난 13일 의회에서 "영국문화원이 2000년부터 북한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김일성종합대학 등 평양 소재 3개 대학 교직원 200명에게 제공해온 영어교육을 연내 6개 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하웰 차관은 '북한에 제공하는 영어 프로그램의 가치와 영향력'을 묻는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의 질문에 영국인 계약직 강사 4명이 평양에 파견돼 김일성대, 평양외국어대, 김형직사범대 교원에게 영어를 교육하고 교육커리큘럼 개발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

● **이번 장마기간 北강수량 평년의 3배 넘어(7/19,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기상청은 19일 올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북한 지역의 강수량이 예년의 3배를 넘는다고 밝힘.
-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26일부터 이달 18일 오전 3시까지 황해남도 해주의 강수량이 682.0mm로 평년 185.9mm의 3.6배나 됐고 개성(658.4mm), 신계(511.4mm)도 평년보다 배 이상 많았음.



● WHO "북한내 원격화상진료 성과...확대 계획"(7/19, 미국의소리(VOA); 조선신보)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 지원한 원격화상진료 서비스가 초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해 이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
- WHO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8년 평양의 김만유병원을 거점으로 2009년 말까지 9개도의 인민병원이 케이블로 연결됐다"며 "이 같은 연결로 지방의 환자들이 김만유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줄었고, 2010년 말까지 화상상담 441건과 화상교육 164건이 이뤄졌다"고 밝힘.
- 한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작년 3월 "먼거리의료(원격진료) 봉사체계가 지난달부터 가동되고 있다"며 "(북한) 보건성은 체신성과 협력해 2012년까지 먼거리의료 봉사망을 각 시·군 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함.

● "北, 구금시설 182곳에 7천600명 수용"(7/20,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NKDB)는 북한에 최소 182곳의 구금시설에 최대 7천600여 명이 수용돼있다고 20일 밝힘.
- NKDB는 이날 탈북자 1만3천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및 구금시설 운영체제와 인권실태를 담은 보고서 2권을 발간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매끼 한 그릇도 안 되는 옥수수죽과 소금국으로 연명할 정도로 생존권에 대한 위협도 매우 심각함.

● "탈북자 귀환에 北서 지하종교활동 늘어"(7/20, 연합뉴스)

-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강제복송 등으로 북한으로 되돌아가면서 북한에서 비밀스런 종교활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도희운 (사)행복한통일로 대표는 20일 사회·종교 종합일간지인 '천지일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포럼에서 발표를 통해 "1998년 이후 식량난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종교를 접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하거나 강제송환되면서 북한 내 비공식 종교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 北 "美 달라이 라마 초청은 내정간섭적 반중책동"(7/1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중·미 사이의 갈등을 불러오는 내정 간섭행위'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인용,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방미와 미국 측 태도를 비난
- 노동신문은 "달라이가 이번에 미국 정계의 고위 인물들과 협상함으로써 몸값을 올리고 '분립주의 노선'에 대한 지지를 추구했을 것은 뻔하다"며 "미국은 달라이를 자국에 초청해 티베트 분리독립을 부채질하면서 내정 간섭적인 반중국책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
- 이 신문은 또 "미국이 티베트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할 목적 밑에(아래) 표면상으로는 티베트의 분리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뒤에 돌아앉아서는 티베트 분립주의 세력을 적극 부추기는 등 양면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응변으로 실증해준다"고 미국을 비난

#### ● '북극자원 쟁탈전' 北매체 객관적 보도(7/18, 노동신문)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날로 치열해지는 북극자원 쟁탈전'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타전했으며, 이 글은 김일성 가계 우상화와 북한체제 찬양 일색인 북한 매체들의 기존 보도와 사뭇 다른 점이 눈길을 끄.
- 중앙통신은 이 글에서 "최근 시기 북극자원을 둘러싸고 유관국들 사이의 쟁탈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러시아·덴마크·캐나다·미국·노르웨이 등이 북극에서 벌이는 군사적 경쟁을 상세히 소개
- 중앙통신의 보도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러시아와 덴마크에는 비록 낮은 수위이기도 하지만 비판을, 미국과 캐나다·나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이나 비판 없이 발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보도
- 여기에서는 북한 매체가 그동안 호의적으로 보도했던 러시아는 물론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견지했던 덴마크의 행태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통신은 "최근 캐나다 국방장관이 올해 8월 북극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토는 캐나다의 대규모 군사연습이 러시아에 명백한 인식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2척의 핵잠수함을 북극에 파견했다"고 짧게 전함.
- 이 대목에서는 북한이 적대시 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 미국이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북한 매체들이 자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지 않은 문제에는 비교적 객관적인 보도태도를 유지하



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北박의춘, ARF 앞두고 몽골 방문(7/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1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전함.
- 이 방송은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이 17일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방문 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박 외무상은 오는 21~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보임.

● **英의회, 북한인권 조사 촉구 동의안 제출(7/20, 미국의소리(VOA))**

- 영국 의회에서 북한 정부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의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유엔이 북한 정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라는 이름의 '얼리데이모션(Early Day Motion, EDMs) 2079'를 제출
- 브루스 의원은 "공개처형과 영아살해, 심각하고 조직적인 고문,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 종교탄압, 성폭력, 강제 복종된 탈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영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

● **아세안 연례장관회의 내일 印尼 발리서 공식개막(7/20, 연합뉴스)**

- 아세안을 주축으로 한 연례 외교장관회의가 21일부터 2박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개최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6자회담 당사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양자·다자접촉 가능성이 제기
- 정부 당국자는 "공식적인 회담 형태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비공식 회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북측의 최근 태도로 볼 때 성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정부는 ARF 회의결과로 나올 의장성명에 ▲남북대화를 필수단계로 해서 6자회담의 사전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 우리농축산물프로그램(UPEP)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1874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짐.



- **北, 日자민당 울릉도 방문에 "방관 말아야"(7/20, )**
  - 북한은 20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내달 초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의 영토팽창 야망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독도는 민족공동의 재부이고 고유의 영토인 독도는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땅"이라며 이같이 밝힘.
  
- **세계YWCA, 北 어린이·여성인권 지원 결의(7/21, 연합뉴스)**
  - 한국YWCA(회장 강교자)가 제안한 '북한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지원 노력 촉구 결의문'이 지난 1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27차 세계YWCA 총회'에서 채택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결의문은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 탈북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탈북자들을 지원한다 ▲북한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참여하고 지원을 촉구하는 로비활동을 전개한다 ▲한반도 DMZ 방문단을 조직한다 등 7개 조치를 담고 있음.
  
- **"北 원색적 대외비난 표현 '세계최악"(7/22,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
  - 북한이 세계 최악 수준의 원색적인 대외비난 표현을 최근 늘리면서 행간의 의미를 제대로 읽는 노력이 중요해졌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22일 보도
  - 신문은 최근 북한이 훈련용으로 호전적인 구호를 내건 한국의 일부 전방군 부대와 관련해 "무자비한 보복 성전으로 대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코믹하게도 보이는 현란한 언어를 잇 따라 쓰고 있다고 전함.
  - 한국 내 한 당국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사용한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련의 발언들이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응을 보였으나, 다만 북한이 때로는 자신들의 의사를 그대로 표현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발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北 김계관, 美연구기관 초청으로 곧 방미"(7/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복수의 미국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계관 제1부상의 방미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추진해 왔다"며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민간연구기관 주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김 제1부상에게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기로 했다"고 전함.
  - RFA는 "김 제1부상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주로 만날 예정이지만 미국 외교당국자들과 비공식 접촉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재개 결정에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분배감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



적도 있다"고 소개

#### 나. 6자회담(북핵)

##### ● 남북 비핵화회담.. "6자 재개 노력 합의"(7/22, 연합뉴스)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2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동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위 본부장과 리 부상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각) 발리 웨스틴 호텔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두 시간 동안 회담
- 리 부상은 회담 직후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9·19 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리에 와서 남측 단장(위성락 본부장)을 만났다"면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힘.
- 위 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은 생산적이고 유익한 대화였다"면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지속해 6자회담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함.
- 남북한 간 비핵화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방안이 강한 탄력을 받으며 교착국면에 놓인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스는 전함.

##### ● 남북 접촉 계기로 '북미대화'도 탄력(7/23, 연합뉴스)

-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는 남북 비핵화 회담을 "중요한 행보"라고 환영하면서 한국, 일본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
- 미국은 회담 직후 한국 정부로부터 주요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들었으며,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김성환 외교장관과의 회담 및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추가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
- 중국과는 이미 남북회담이 열리기 직전 발리에서 열린 클린턴 장관과 양제츠 외교부장 간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
- 남북 비핵화 회담이 한 두 차례 더 있는 뒤 본격적인 북미대화가 이뤄질지, 아니면 김 부상의 방미를 계기로 곧바로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은 북미 간의 대화가 뒤따를지는 당분간 이어질 한·미·일 3국간의 후속 협의 결과에 달릴 전망



### 3. 대남정세

- **北 "반국가단체 조직 사건은 파쇼적 폭거"(7/18, 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매체들은 18일 최근 검찰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지하당 설립을 꾀한 혐의로 10여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파쇼적 폭거"라고 맹비난
  - 북한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대변인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이명박 역적 패당은 탄압의 마수를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과 야당에까지 뻗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하면서 현정권을 상대로 한 투쟁을 선동
  - 북한 매체들은 "괴뢰 패당이 통치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더욱 매달리는 것은 상투적 수법"이라며 "이번 간첩단 사건 조작과 탄압만행 역시 (남한) 인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고 자신들에게 쏠린 이목을 탄 데로 돌리며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
- **"금강산문제 두 번째 남북접촉 때 분위기 좋았다"(7/19, 연합뉴스)**
  - 지난 13일 진행된 남북 간 금강산 재산권 관련 협의는 지난달 29일 첫 협의에 비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민관합동협의단 자격으로 두 차례 협의에 모두 참석했던 금강산 투자기업의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9일 남북 간 첫 협의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냉랭했는데 13일 두 번째 협의 때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남북 간 대화가 이어졌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양측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지만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던 첫 접촉 때와 달리 '일단 들어보자는 분위기였다'며 "양측 모두 금강산 관광문제를 잘 풀어보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
- **김국방 "한미일 3각 동맹체제 생각 안 해"(7/20, 연합뉴스)**
  - 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중·러 협력체제에 대응해 한·미·일 동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동맹의 구축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원칙에 찬성한다"면서 "전술핵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갖다 놓겠다고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 **北단체, 南국가보안법 비난(7/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민주법률가협회와 인권연구협회가 22일 공동고발장을 발표하



고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파쇼악법'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4개 장과 25개 조문, 부칙으로 돼 있는 보안법은 가장 반인권적인 파쇼악법"이라며 "보안법은 분열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가는 인권문제인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부정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밝힘.
- 이어 "이명박 패당이야말로 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 불모지로 전락시킨 반인권범죄행위의 주범"이라며 "괴뢰 패당은 보안법을 지체 없이 철폐하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한미군사훈련에 "참을성에 한계" 위협(7/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다음달 16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군사적 보복을 위협
-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실시하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방어훈련이 아닌 북침을 노린 핵공격연습"이라며 "호전광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북침핵전쟁연습계획을 당장 취소해야한다"고 주장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北 경수로용 원전 부품, 美서 폐기돼"(7/18)

-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 경수로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원전 부품들이 미국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조용히 폐기 수순을 밟았다고 미국 지방언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음.
- 미 포츠머스 헤럴드는 "뉴햄프셔의 피즈 국제무역항의 한 창고에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몇 주간 원전 부품 해체작업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 원전사인 웨스팅하우스의 스콧 쇼 대변인은 "이번 프로젝트는 원자로 부품을 폐기하는 작업이 있다"면서 "한국전력(KEPCO) 소유였던 이 부품들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음.
- 이번에 해체된 원자로 부품들은 당초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쇼 대변인은 덧붙였다. 그러나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로 인해 북·미 간 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들 부품은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음.

##### ● '아세안' 남북외교전 본격화..北대표단 오늘 도착(7/21)

- 아세안 연례 외교장관회의가 21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본격 개막된 가운데 아세안을 무대로 한반도 현안대응을 둘러싼 남북의 외교적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음. 특히 박의춘 외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예정이어서 김성환 외교장관과 박 외상이 회의기간 비공식 회동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음.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은 21일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역내 안보·정치현안을 논의했음.
- 참가국들은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금융분야를 포함한 제반 협력사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아세안+3 체제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하노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의 구체적 추진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임.
- 또 이날 오후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려 통상투자,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의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아세안 통합 등 동남아 정세를 논의함.



- 이에 앞서 아세안은 19일 외교장관 회의(AMM)를 열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장관들은 이어 "6자회담 관련국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한 ARF가 관련국간 대화와 논의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박 외상이 이끄는 북한 공식 대표단이 이날 오전 몽골을 떠나 베이징 또는 자카르타를 경유해 저녁 발리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 대표단에는 박 외상 외에 리홍식 국제기구국장과 김창일 아주국장 등 6~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베이징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대표단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입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김성환 장관은 이번 회의기간 박 외상과 비공식 접촉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두 사람이 비공식 회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성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한편 오는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채택될 의장성명 초안을 둘러싸고 남북한 간 외교전이 본격화되고 있음. 정부는 이번 ARF 의장성명에서 ▲남북대화를 필수단계로 해서 6자회담의 사전조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 우리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거듭 표명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1874호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 중임.

#### ● "美, 한국에 북미대화 선행 가능성 시사"(7/21)

- 미국이 북미대화를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시사 하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라"고 압박해 한국 정부가 곤란해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 신문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남북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과 접촉하라고 강하게 재촉했음.
- 아사히신문은 또 남북 간에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에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문제에 관련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안보상 가장 주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다. 미국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각을 북한에 전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 아사히신문의 '미, 남북대화 압박론' 보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님. 지난 4월에는 '힐러리 장관이 4월17일 방한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의 성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겠느냐"고 남북대화를



제안했다고 보도했고, 지난 18일에도 '클린턴 장관이 김성환 장관을 만나 남북대화가 늦어지는 상황에 갑갑해했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에 남북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차가 없다"며 "우리가 북측에 이미 비핵화 남북대화를 제안해놓은 만큼 ARF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캠퐀 "북미 고위급회담 추진은 사실무근"(7/21)

- 커트 캠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1일 미국이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캠퐀 차관보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히고, 자신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지에 대해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 간에는 회담이 없다"고 덧붙였다.

#### ● 캠퐀 "효과적인 남북대화가 핵심"(7/22)

- 커트 캠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북미대화 전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캠퐀 차관보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동의할 경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 국무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 근본적인 (관계)개선과 대화가 있고 우리가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이전에, 남북 간에 진지하고 효과적인 (대화)노력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동북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사안은 한국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남북대화라고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 ● 남북, 6자회담 결렬 이후 첫 비핵화회담(7/22)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2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동했다.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 2년7개월만으로,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 개최되는 남북 간 최초의 비핵화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위 본부장과 리 부상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각) 발리 웨스틴 호텔에서 만났다. 북한 측은 이에 앞서 리 부상이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 공식 임명됐음을 우리 측에 알려왔다.
- 리 부상은 회담장에 들어서 위 본부장과 악수한 뒤 "안녕하십니까. 리용호입니다"라며 인사말을 꺼냈다. 위 본부장은 "2004년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토론회에서 만난 뒤로 처음 뵙습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라며 덕담을 건넸고, 리 부상은 "고맙습니다"라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 두 사람의 회동에는 남측에서 조현동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북핵 실무자 등 5명, 북측에서 최선희 외무성 미국 부국장 등 4명이 배석했음. 회담은 1시간 또는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동에 대해 "6자회담이 정체된 이후 열리는 남북 간 최초의 비핵화 회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6자회담 계기가 아닌 기간에 남북 수석대표가 별도로 만난 전례가 없어 의제는 특정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에 관한 양측의 관심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의 배경에 대해 "우리 측의 비핵화 회담 제안에 북측이 리 부상에 대해 6자회담 수석대표 자격을 부여해 위 본부장과의 회담에 응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리용호 "6자회담 하루빨리 재개 노력 합의"(7/22)

-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2일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동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했음.
-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 2년7개월만으로,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 개최되는 남북 간 최초의 비핵화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위 본부장과 리 부상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각) 발리 웨스틴 호텔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방안을 놓고 두 시간 동안 회담했음.
- 리 부상은 회담 직후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발리에 와서 남측 단장(위성락 본부장)을 만났다"면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을 확고히 이행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용의들이 표명됐다"고 설명했다.
- 위 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은 생산적이고 유익한 대화였다"면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지속해 6자회담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남북은 그러나 이번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거나 차기 회담을 개최할지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음.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해 "우리가 추구해오던 3단계 접근의 중요한 일보가 됐다"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푸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음.
- 이 당국자는 앞으로 차기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릴지에 대해 "딱히 정해지진 않았다"면서 "유용했던 오늘 대화내용을 내부적으로 소화해보고 그 이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음.



- 그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병행 여부에 대해서도 "유용한 대화과정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오늘 협의결과를 내부적으로 소화하고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기간 다른 관련국들과도 협의해 보겠다"고 말해, 협의결과에 따라 병행을 용인할 뜻을 시사했음.
- 두 사람의 회동에는 남측에서 조현동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북핵 실무자 등 5명, 북측에서 최설희 외무성 미국 부국장 등 4명이 배석했음. 북한 측은 이에 앞서 리 부상이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 공식 임명됐음을 우리 측에 알려왔음.
- 남북한 간 비핵화 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방안이 강한 탄력을 받으며 교착국면에 놓인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남과 북은 23일 ARF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외교장관과 박 외상이 비공식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 남북 외교장관 발리 ARF서 비공식 접촉(7/23)

- 남과 북이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23일 외교장관 간 비공식 접촉을 했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23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도중 비공식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음.
- 남북 외교장관이 접촉한 것은 2008년 7월 싱가포르 ARF 외교장관회의 이후 3년 만임. 두 사람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현지시각) 회의시작 전 대기장소에서 만나 22일 있었던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 두 사람은 대기장소에서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타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으며, 회의장에도 나란히 입장했음. 또 오전 11시6분께 회의장 1층 룸에서 '커피타임'(휴식시간)을 이용해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음.
-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만찬)도 만났으며 오늘 중으로도 여러 차례 만날 것"이라고 밝혀, 회의 도중 간헐적으로 만남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음.
- 이런 가운데 남과 북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접근방안의 첫 단계인 남북 비핵화 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후속 대화의 방향과 수순을 놓고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음.
- 김성환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낮 국제회의장(BICC)에서 오찬을 겸한 3자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방향을 논의했음.
- 앞서 김 장관과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전 회동해 전날 개최된 남북 비핵화 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남북 대화와 북미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장관은 또 이날 오후 마쓰모토 일본 외무상과도 외교장관 회담을 함.



이에 대해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이날 오전 ARF 회의가 열리는 도중 류진민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북·중 고위급 회동을 했음. 리 부상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과도 만났음.

#### ● 한미일 "北 진정한 남북대화 노력해야"(7/23)

-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23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포함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믿음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낮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오찬을 겸한 3자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 3국 장관은 이어 전날 개최된 남북 비핵화 회담을 환영하고 "남북대화가 앞으로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앞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간다는데 합의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을 통해 보여주도록 설득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들 장관은 특히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은 3국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며 3국은 연대해 이에 대처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북한에 대해 "납치 및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음.
-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 확보를 위해 다자적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UEP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3국 장관은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05년 9.19 공동성명하의 북한의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UEP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 ARF "남북대화 지속돼야" 의장성명 채택(7/23)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23일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공식 폐막했음.
-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채택한 의장성명은 22일 개최된 남북 비핵화 회담을 거론,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를 환영하고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 의장성명은 이어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용한 여건 조성 노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일보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 지역



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비확산 체제 유지에도 필수적 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의장성명은 특히 "북한 우리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과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밝혔다.
- 이번 의장성명은 남과 북이 비핵화 회담을 계기로 대화 재개를 본격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접근방안과 북한 UEP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의장성명은 별도의 항목을 통해 "우리농 축축활동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대응했다"고 북한 측의 입장을 소개했음.
-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의장성명은 "이번 사안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다"는 북한의 입장과 "이번 사안은 미결상태"라는 일본의 입장을 병기했음.

#### ● 청와대 "남북관계 핵심은 여전히 천안함·연평도"(7/24)

- 청와대는 2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북한 비핵화회담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8월 남북관계 변화' 발언으로 8·15 광복절을 전후해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
- 특히 남북 양자관계의 경우 정부가 한 걸 같이 내세워 온 조건인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입장 표명이 선행되어야만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다음 달 당장 중대변화가 나타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했다고 해서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남북 양자관계는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설에 대해서도 "역시 양자 간 문제이므로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직결돼 있다"면서 "아직 천안함과 연평도의 상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대응 기조를 ▲남북 양자관계 ▲북한 비핵화를 고리로 한 다자관계 ▲인도적 차원의 접근 등 세 갈래로 구별하는 '3트랙 분리 대응'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할 방침임.
- 남북 양자관계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이 있어야 풀릴 수 있지만, 비핵화 6자회담 재개와 같은 다자외교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이해를 고려해 철저히 별도의 트랙에서 다룬다는 것임. 아울러 북한의 유아와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역시 이 둘 두 가지 이슈와 철저히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임.



- 이 관계자는 "비핵화 회담이 열렸다거나 금강산에서 인도적 지원 관련 논의를 한다 해도 이를 남북 양자관계의 해빙이나 정상회담에 직결시키는 것은 비약"이라며 "실현되기 어려운 '거품'을 만들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면 정부의 신뢰만 훼손된다"고 말했다.

## 나. 미·북 관계

### ● 美 "남북회담, 중요한 조치"(7/23)

- 미국 정부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남북 한 간 비핵화 회담에 대해 "중요한 행보(important step)"라고 이번 회담을 이끈 한국 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인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오바마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6자회담 재개 전 북한이 비핵화 약속 준수에 진정성을 보이고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우리는 이번 회담을 열도록 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남북 간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은 대화에 대한 의지와 비핵화 약속 준수에 대한 진지함을 증명할 조치를 다자회담 재개 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발리를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수행 중인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 비핵화회담이 열린 뒤 "그들(남북한 관계자)이 오늘 만난 것은 중요한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 그는 "미국의 다음 조치는 광범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우선 한국과 협의하고 이후 일본과 할 것이며, 그 후 향후의 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급하게 뛰어 들 것은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한국과 건설적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명확하고 진지한 신호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인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미덕"이라면서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길을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길일지 파악하는데 신중해 지고 싶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교도통신 기자에게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길 원한다"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오늘 회담이 어땠는지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 당국자들은 미국이 중국과 함께 지난 수 주간 남북 양측이 만날 수 있도록 "깊이 개입했다"고 전했다.

### ● "北김계관, 美연구기관 초청으로 이달 중 방미"(7/23)

-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민간연구기관의 초청으로 곧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복수의 미국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계관 제1부상의 방미를 미국 내 한반도 전



문가들이 주축이 돼 추진해 왔다"며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민간 연구기관 주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김 제1부상에게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기로 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김 부상이 다음 달 1일 뉴욕을 방문하는 것으로 비자가 발급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등 구체적인 방미 일시와 초청 주체에 대한 정보는 엇갈리는 상황임. 김계관의 미국 방문이 성사되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성사된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북미대화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김계관 방미 카드는 지난해 봄에도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추진됐으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무산된 바 있음.
- RFA는 "김 제1부상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주로 만날 예정이지만 미국 외교당국자들과 비공식 접촉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나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재개 결정에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분배감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소개했음.
- 이 방송은 또 '미국 의회 소식통'의 언급을 인용해 "미국은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두 번째 단계인 미북 간 대화에 이르는 중간 지렛대로 대북식량지원을 활용하기를 원한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 국면에 진입하는 9월 이전에 대북식량지원 결정을 매듭짓고 북한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토대를 마련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캠프 "北김계관 방미 한·일과 협의 중"(7/23)

- 커트 캠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3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민간연구기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현재 한국, 일본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캠프 차관보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캠프 차관보의 이 같은 언급은 김 제1부상의 미국방문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향후 북미대화 성사 여부와 관련해 주목됨.
- 그는 이어 "오늘 오후에도 (한국, 일본과) 만나서 얘기했다"며 이날 낮 한·미·일 3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음을 시사했음.

#### ● 김계관 28일께 방미..뉴욕서 북미대화 재개(7/24)

- 북한의 핵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28일께 미국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특히 김 제1부상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져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북미대화가 공식 재개될 전망이다.
- 북수의 외교소식통은 "김 부상의 뉴욕 방문을 놓고 한·미 정부가 충분히 조율했으며 조만간 미국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 포럼(ARF) 행사를 마치고 곧 홍콩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북미대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제1부상은 지난해 3월 초청했던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와 코리아사이어티 등 민간 연구기관들이 다시 초청하는 형식으로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제1부상은 뉴욕 방문기간 현지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비롯한 북핵 협상 관련 고위당국자들과 회동, 북핵 문제와 대북 식량지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2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1년7개월 만에 북미대회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미 국무부는 김 제1부상에 대해 뉴욕을 방문지역으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김 제1부상의 워싱턴 방문 등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우리 정부는 남북 비핵화 회담과 북미대회의 병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 제1부상의 방미를 통한 북미대회를 용인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AR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협의에서 김계관 제1부상의 방미시 공식 레벨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라고 했다"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김 제1부상은 이번에 뉴욕에만 갈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김 제1부상의 방미를 염두에 두고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한편 북미대회가 본격화되면서 피랍자 문제가 최대 정치적 현안으로 걸려 있는 북일 대화도 급속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정부 고위당국자는 "ARF를 계기로 일본과 접촉한 자리에서 북일대화를 시작하라고 했다"면서 "일본 측은 ARF에서 납치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 측은 '그건 다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다. 중·북 관계

##### ● 北 박의춘-中 양제츠, 印尼 발리서 회동(7/23)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음.
- 박 외무상과 양 외교부장은 이날 아세안 안보포럼이 열리고 있는 발리에서 만나 6자 회담 재개 방안과 양자 관계 진전방안을 논의했음. 박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6자회담을 조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자고 제의했으며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 양 부장은 중-북 우호관계는 보석처럼 소중한 것이라며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경제와 통상 협력을 심화하며 민간 교류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 ● 北-中, 청진항도 공동개발 본격화(7/24)

- 중국이 북한 황금평·나선 경제특구에 이어 최근에는 나선특구와 청진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등 청진항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24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공병대를 투입해 훈춘(琿春)~나선간 도로에서 뺏어나와 청진으로 향하는 약 15k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며, 청진항을 보수·확장하는 공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개발사업은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로 투먼(圖們)시 정부와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 황금평·나선 경제특구 착공식이 이뤄진 6월께 협의를 이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 소식통은 "이번 개발에 들어가는 자재와 비용 등은 모두 중국이 부담한다"며 "청진항 개발에는 중국 다롄(大連)에 위치한 해양어업집단지공사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 중국은 이미 작년 7월 청진항 3, 4호 부두를 15년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북한으로부터 확보했으며, 이번 투자로 넓고 소규모인 청진항을 무역항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할 계획임. 또 2015년까지 청진~룡징(龍井)시 싰허(三合)통상구 고속도로(47km)와 허룡(和龍)-북한 남평-청진 고속도로(39km)도 신설될 예정임.
- 양국은 이후 함경남도의 단천항 개발과 관련한 공동투자 협의회도 진행해 최근 협약을 체결했으며 곧 도로와 항만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나진, 선봉, 청진, 단천까지 4개 항구가 개발돼 거미줄처럼 이어지면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관문인 훈춘과 투먼, 싰허의 물자가 중국 남방이나 해외로 쉽게 운송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며 "주로 투먼시가 나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나서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청진항 개발에 관심을 갖고 북한과 개발투자 협의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 中화룡-北혜산·평양 관광코스 신설(7/24)

- 북한과 중국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화룡(和龍)-북한 삼지연 관광코스를 혜산과 평양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길림신문이 24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화룡시는 북한 양강도와 현재 운영 중인 화룡-삼지연 관광코스를 혜산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13일 합의했음.
- 북한 당국은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입국 수속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음. 이에 앞서 화룡시는 지난달 북한관광총국과 '2011년도 관광합작협약'을 맺어 화룡-삼지연 관광코스를 평양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음. 이 코스를 이용하면 삼지연과 평양은 물론 금강



- 산과 모향산, 관문점 등도 관광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3년째를 맞은 올해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법 발표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의 몰수·동결, 재산 정리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하며 우리 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한편 관광 외화벌이 다변화를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음.
  - 지난 4월 북한 라선과 중국 훈춘(琿春), 러시아 극동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이 시작됐고 용정(龍井)에서 북한 칠보산을 둘러보는 관광노선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출발, 훈춘을 거쳐 라선특구를 다녀오는 자동차 관광이 잇따라 신설됐음.
  - 북·중은 최근 훈춘에서 김일성 주석이 1933년 항일무장 투쟁을 국내로 확대할 전략을 제시했다는 '왕재산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온성을 다녀오는 1일 관광코스도 20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음.

#### ● 北-中, 라선 농업시범구 조성 본격화(7/24)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조성기로 한 북한 라선특구 내 농업시범구 공사가 본격화됐다고 연변일보가 24일 보도했음.
- 신문은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가 북한 라선시와 공동으로 라선특구 내에 건설기로 합의한 '중조(中朝) 합작 농업 시범구' 사업이 최근 비닐하우스 설치와 우물파기 등 기초 공사가 본격화되는 등 본 궤도에 올랐다고 전했다.
- 이 농업시범구에는 벼 시범구(4ha)와 벼짓 시범구(1.3ha), 옥수수 시범구(4ha) 등이 조성됨. 라선시농업연구소와 선봉농장에 조성되는 벼 시범구는 3ha의 일반 논 이외에도 1천㎡의 비닐하우스 등 선진 농업시설이 들어섬.
- 표고벼짓과 목이버섯 등을 생산하게 될 벼짓 시범구는 라선시 농업연구소 내에, 옥수수 시범구는 선봉시 용수농장에 각각 조성됨. 라선 농업시범구 조성에는 최소 123만2천 위안(약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연변일보는 전했다.
- 라선특구 공동개발에 합의한 북·중은 지난달 9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등 양국 고위층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중국 아태재단이 투자하는 라선시멘트공장과 라진-원정리 도로 보수 공사, 라선 고효율 농업시범구 건설 착공식을 했음.

#### 라. 러·북 관계

##### ● <러, 對 북한 가스공급 프로젝트 집중 검토>(7/22)

-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일간 '모스크프스키예 노보스티'가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은 크렘린의 지시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할린산 천연가스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 있음.
- 러시아 외무부가 내년 9월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북아 지역 안정화에 필수적인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으로 가스관을 부설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를 크렘린이 받아들여 가스프롬에 프로젝트 준비를 지시했다는 것임.
  - 가스프롬은 북한으로의 가스관 지선 건설 외에 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건설 사업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러시아와 북한 인사들 간 접촉이 잦아진 것도 가스관 부설 프로젝트 논의와 연관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 지난달 28일에는 김영재 주러 북한 대사가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가스프롬 본사를 방문해 에너지 협력 문제를 논의했음. 그로부터 얼마 뒤인 7월 4일 알렉산드르 아나넨코프 부사장이 이끄는 가스프롬 대표단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강석주 내각 부총리를 만나고, 김희영 원유공업상과 실무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음.
  - 아나넨코프 부사장의 방북도 가스관 부설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모스크프스키에 노보스티는 분석했음.
  - 러시아가 이처럼 북한으로 가스관을 부설하는데 공을 들이는 것은 안보·경제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경제 현대화를 이끌 동력으로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를 위한 투자 분위기 조성의 좋은 기회인 내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 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에 동북아 지역 안보의 핵심인 한반도 안정화는 중요한 관심 사항임.
  - 러시아가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분쟁 해결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이유도 이런 상황과 연관돼 있음. 동시에 동북아의 주요 강국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외교에서 일정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산도 있음.
  - 하지만 중국과 달리 북한을 상대로 사용할 지렛대가 만만찮은 러시아에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스관 부설은 유용한 카드가 아닐 수 없음.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야 하는 러시아에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부설은 매력적인 프로젝트임에 틀림없음.
  - 러시아는 몇 년 전부터 연간 100억㎥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는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북한 경우 가스관은 이 사업 실현을 위해 가장 경제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만 동의하면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는 프로젝트임.
  -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 판매처 확보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북한 경우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평양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 "러,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北 입장 환영"(7/22)

- 러시아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2일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러시아-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장관 회담의 틀 내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회동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북측과의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주로 논의했다"며 "러시아는 사전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북한의 확인된 입장을 환영한다"고 말했음.
- 장관은 이어 "북한 측은 러시아가 대화 재개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 등을 포함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기울인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음.
-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북한 외에 중국, 베트남, 호주 외무장관과도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즉각적 재개를 주장해 왔음.

마. 기 타

● 北-몽골 외교장관회담 개최(7/19)

- 몽골을 방문 중인 박의춘 외무상이 18일 고펜자브 잔단사타르 몽골 외교장관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 정세를 통보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유엔개발계획, 北에 풍력발전 지원"(7/22)

- 유엔개발계획(UNDP)은 올해 북한에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음.
- RFA는 "UNDP는 북한이 풍력에너지 장비를 자체 제작할 수 있게 하고 풍력에너지 전문가와 기술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은 풍력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UNDP는 북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수립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조언하고 있다고 RFA가 소개했음.
- UNDP 측은 이 방송에 "북한의 에너지 기술자 및 전문가를 중국, 필리핀, 인도 등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농촌 에너지 지원 사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UNDP는 홍수, 가뭄 등 북한의 자연재난 관리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음.

● 北, 한미군사훈련에 "참을성에 한계" 위협(7/24)

- 북한이 다음달 16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



- 다"며 군사적 보복을 위협했음.
-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실시하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방어훈련이 아닌 북침을 노린 핵공격연습"이라며 "호전광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북침 핵전쟁연습계획을 당장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음.
  - 신문은 최근의 김정일·정은 표적사건, 구호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기어이 압살하려는 호전광들의 계획적 도발행위"라며 "만약 역적패당이 외세와 결탁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천만군민은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선군조선의 준엄한 총대맛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내달 16일부터 26일까지 해외미군 3천여 명을 포함한 미군 3만여 명과 한국군 5만6천여 명이 참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캠프캐럴 헬기장 내 드립통 흔적 없다"(7/20)

-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헬기장에 대한 토양시추조사에서 드립통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중간조사 결과 금속성 매설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헬기장 구역에서 고엽제 드립통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관심은 또 다른 매물 의혹지인 D구역과 41구역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공동조사단은 지난 11일부터 캠프 캐럴 헬기장 1 구역 내 총 40개 지점에 대한 토양시추조사(coring)를 시작, 지난 18일 시료 채취를 완료했음.
- 한미 양국은 지구물리탐사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난 지역과 2개의 비투과 지역, 기타 건강위해성 평가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지역 등을 포함해 총 40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음.
- 토양시추조사(coring)는 땅에 2인치 정도의 가는 관을 박아서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당장 고엽제 오염 여부를 알기는 어려움. 그러나 기반암에 도달할 때까지, 즉 암반이 나올 때까지 시료채취를 진행하는 만큼 드립통 등의 물체가 매립돼 있을 경우에는 이상 여부를 즉각 파악할 수 있음.
- 정부 관계자는 "40개 지점에서 모두 기반암에 도달할 때까지 시료를 채취했지만 중간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해 헬기장에 드립통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음.
- 특히 지표투과레이더(GPR), 전기비저항탐사(ER), 자력탐사(MS) 등 3



- 가지 방법의 지구물리탐사에서 모두 이상 징후가 나타났던 헬기장 북쪽 지점에 대해 공동조사단은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시료를 채취했지만 드럼통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 헬기장 구역은 이번 고엽제 매립 의혹이 촉발된 곳임. 전역 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는 지난 5월 미국 현지 TV 인터뷰에서 "헬기장에서 가까운 기지 뒤쪽에 드럼통을 묻었다"고 밝힌 바 있음.
  - 실제 지난 8일 한미 공동조사단의 중간발표에 따르면 헬기장 1 구역에서 MS와 ER 결과 금속성 매설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 GPR 조사에서는 드럼통과 같은 물체가 지하에 분포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레이더 신호 패턴이 관측돼 하우스 씨의 증언대로 드럼통이 매설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음.
  - 드럼통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드럼통을 파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엽제나 기타 중금속 포함 여부는 채취된 시료를 최종 분석한 뒤인 오는 8월 말께 밝혀질 전망이다. 헬기장 구역에서 고엽제 드럼통 매립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지구물리탐사가 완료된 41구역과 D구역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하우스 씨가 헬기장을 지목한 것과 달리 미군은 화학물질을 41구역에서 D구역으로 옮겨 매립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지역의 드럼통 매립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임.
  - 고엽제 매립 의혹 촉발 후 가진 브리핑에서 데이비드 폭스 주한미군 시설관리사령관은 "1978년 기지 내 41구역 화학물질을 D구역에 옮겨 매립했다가 1979년 발굴해 이동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로서는 이 화학물질이 어디로 이동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41구역과 D구역의 경우에도 지구물리탐사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거나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토양시료 채취를 실시할 계획임.
  - 양측은 7월 말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 회의를 개최, 헬기장 1 구역 시료 채취 시 이상 여부와 캠프 캐럴 내 수질 조사, 외부 토양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 외교부 "FTA 비준안 8월 처리계획 변함없다"(7/20)

- 외교통상부는 미국에서의 한미 FTA 이행법안 가을 처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8월 비준안 처리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이시형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추진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없어 의회와 백악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윌리엄 데일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현지시간으로 19일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며



미 고위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한미 FTA 비준이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이 조정관은 또 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겠지만 지금은 국회에 협정안이 제출돼 있어 그대로 비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이 조정관은 이와 함께 한-EU FTA 잠정발효와 관련 "현재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은 기업이 전체의 54.6%에 불과해 이를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인증수출자 지정요건 완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 추가 혜택 부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고엽제 의혹 제기 스티브 하우스 방한(7/20)

-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매립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가 직접 한국을 방문함. 20일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고엽제대책위)에 따르면 스티브 하우스 씨가 오는 24일 방한해 국회와 캠프 캐럴 등을 방문할 예정임.
- 전역 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는 지난 5월 미국 현지 TV 인터뷰에서 "캠프 캐럴 내 헬기장에서 가까운 기지 뒤쪽에 드럼통을 묻었다"고 밝히면서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의혹을 처음 제기했음.
- 고엽제 대책위 관계자는 "하우스 씨가 24일 오후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표를 발권한 것까지 확인했다"면서 "임진강에 고엽제를 무단 방류했다고 폭로한 전 주한미군 장교 필 스투어트 씨와 동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하우스 씨는 일단 오는 25~26일째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고엽제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소화할 예정임. 이어 27일 '캠프 캐럴'을 방문, 자신이 주장한 고엽제 매립 지역 등을 직접 지목할 계획임.
- 고엽제 대책위 관계자는 "아직 미8군에서 하우스 씨의 방한에 대한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미군이 방문을 불허한다면 캠프 캐럴 주변 고지대에서 매립 지역을 지목할 것"이라고 밝혔음.

### ● "한미, CODA준속 협의" 軍 "사실 아냐"(7/22)

- 일본 한 신문이 "한미 양국이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되고 나서도 미군이 계속 한국군에 관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군 당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음.
- 아사히신문은 22일 '복수의 군사관계자를 인용해 양국이 전작권 이양 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의 준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CODA는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 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규정임. 6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음.
- 아사히신문은 "2015년에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면 논리적으로는



- CODA를 폐지해야 하지만 전쟁이나 긴장 확대를 방지하고, 미군이 담당해온 기능을 남기려고 한미 양국이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음. 미국이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군이 과잉 방어로 치달을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이봉우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2015년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CODA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며 "일본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
  - 이 공보실장은 "다만 공군 작전과 관련해서는 전시에 미 측에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며 "정전 시에 공군 작전과 관련해 (미 측에) 어떤 권한을 줘야 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나. 한·중 관계

### ● 中 "남북대화 우선 원칙 지지"(7/21)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중국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이 21일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 등 현안을 논의했음.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양국 장관은 남북 비핵화 회담을 시작으로 하는 '6자회담 3단계 접근방안'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와 지역·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전했다.
- 중국 측은 특히 '비핵화에 관한 남북대화 우선 원칙을 지지하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진전을 강하게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음. 양국 장관은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기로 했음.
-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우리 측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했음. 또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양제츠 외교부장의 연내 방한을 제의했음.
- 우리 측은 최근 발생한 보하이만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해 중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양국은 향후 유류 유출 등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 공유와 방재활동 지원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음.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중국은 긴급적 빨리 FTA 협상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우리 측은 준비가 되는대로 시작하자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 양국은 이밖에 다롄(大連)과 제주에 각각 영사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음.

### ● 국회 여야대표단, 中 우방귀 면담(7/21)

-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방중 대표단이 21일 우방귀(吳邦國)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음.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 우리 측 대표단인 정 부의장 일행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우방귀 전인대 위원장과 만나 한중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정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방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서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서, "양안(兩岸)을 예로 들며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부터 인민대회당에서는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 제6차 합동회의가 개최됐음. 한중 의회 차원에서 양국 간 핫이슈를 다루는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을 포함한 정치·안보 문제,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 등의 경제·사회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음.
  - 이날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양국 간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는 솔직하면서도 격정적인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측은 특히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중국 선원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 부의장은 회의에서 천즈리(陳至立) 전인대 부위원장이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중국을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음.
  - 회의에서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기되는 원전 안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음. 이번 방중에는 단장인 정 부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종구·박영아·홍정욱·구상찬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최재성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참석했음.
  -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는 양국 의회 간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2003년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과 우방귀 위원장 간 합의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음.
  - 정 부의장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회의 개막에 이틀 앞선 지난 19일 쓰촨(四川) 대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지주민을 위로하는 의원 외교 활동을 펼쳤음.

#### 다. 한·일 관계

##### ● 조선왕실의궤 반환 실무협약의 내달 개시(7/18)

- 일본에 보관돼 있는 조선왕실의궤의 한국 반환을 위한 실무협약이 다음달 시작됨.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조선왕실의궤 등 1천 205책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실무자 간 협의를 오는 8월 초 개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임.
- 일본 공내청이 소장한 한국도서를 한국에 반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은 지난 4월27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6월10일 협정이 발효됐음.
-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문화재청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과 공내청이



실무협약에 참가해 도서 반환 절차와 포장·운송 방식, 도착 후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도서협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오는 12월10일까지 한국 도서 1천205책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반환 기한까지 명시돼 있는 만큼 도서 인수를 위한 실무협약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 <정부, 日 '독도도발'에 절제대응 가닥>(7/19)

- 정부가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과 일본 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추진 등 잇따른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일단 절제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음.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되 일본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맞대응은 자제, 불필요하게 외교갈등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됨.
- 정부는 19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에 대해서 사실상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효과도 없고 목적도 불분명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음.
-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일본 외무성의 조치에 맞대응하면 오히려 독도 문제가 일본의 의도대로 국제 이슈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일본 외무성의 조치가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일본의 의도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임.
- 여기에는 시점 상 6자 회담 재개의 조건과 수순을 놓고 북한과 참여한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려면 일본과의 공조도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임.
- 이와 관련해 한·미·일 외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회담(22일)을 갖고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 추진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그러면서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해당 의원의 방문 자제를 촉구, 외교 갈등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음.
- 다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조병제 대변인)면서 직접적인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도발행위로 대한항공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수위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됨.
- 여기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 정치권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도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무(無)대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이른바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임.
-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 상황 등에 따라 외교부의 일본 국적기 이용 자제령이나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 그동안 일부에서 거론돼왔던 대응카드를 꺼내 들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김외교, 日에 '울릉도방문' 신중대응 촉구(7/23)**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마쓰모토 다케이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신중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음.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계획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 달라"고 일본 측에 밝혔음. 김 장관은 또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

라. 미·중 관계

● **"中, 美와 전면적 외교충돌로 안 갈 것"(7/18)**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17일 티베트를 방문했음. 시 부주석은 중국의 티베트 편입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티베트를 찾았음. 이런 행사에 중국의 최고위 수뇌부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임.
- 그의 티베트 방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전격적으로 면담한데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 시 부주석의 티베트 방문에는 후이량위(回良玉) 국무원 부총리, 리젠궈(李建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부위원장, 두칭린(杜青林) 공산당 통일전선부장 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등이 동행했음.
- 시 부주석은 방문 첫날 티베트의 성도인 라싸 시내에서 라싸 공항까지 38.8km 구간의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가해 테이프를 끊었음. 아울러 시 부주석은 티베트 전통의 흰 두건을 목에 두르고 티베트 편입 60주년 기념 가두행진에 참가하기도 했음.
- 이에 앞서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달라이 라마를 만난 데 대해 17일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엄중한 내정간섭으로 중·미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비난했음.
- 아울러 같은 날 새벽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의 로버트 S 왕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긴급 초치해 엄중하게 따졌고, 장예쑤이(張業遂) 주미 중국대사도 미 국무부에 항의했음.
- 환구시보는 그러나 "1991년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달라이라마 카드'를 써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일로 중국은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전면적인 외교적 충돌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클린턴 "中-아세안 남중국해 행동지침 환영"(7/2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남중국해 긴장 해소를 위한 행동규범 지침에 합의한 데 대해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클린턴 장관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남중국해에서 행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중국과 아세안의 긴밀한 협조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 양 부장은 이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긴 여정"이라면서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이 지역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적절히 다루는 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중국 대표단 대변인이 전했다.

## 마. 중·일 관계

### ● 日검찰심사회, 中 선장 강제기소 '형식상' 결정(7/21)

- 일본 검찰심사회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은 뒤 이미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선장을 강제 기소하라고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 오키나와 나하 지방 검찰심사회는 이날 해상보안청 순시선 '미즈키'를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중국인 선장 잔치슝(詹其雄.42)씨를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 이는 지난 4월18일 1차 의결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어서 법원은 검사 역할을 할 변호사를 지정해 잔씨를 강제 기소해야 함. 하지만 잔씨는 지난해 9월7일 사건 직후인 같은 달 25일 검찰의 처분 보류 결정으로 풀려나 중국으로 돌아간 만큼 2개월 안에 공소장을 보내기 어려워 공소 기각될 공산이 큼. 앞으로 송달 여부 등을 두고 일본 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 앞서 나하시검이 지난 1월21일 잔치슝 선장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하자 같은 달 말 자바현에 거주하는 언론인 등이 이의신청을 냈고, 나하시검 검찰심사회는 지난 4월18일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28일 "선장이 귀국한 뒤 센카쿠열도 부근 영해 안에서 위법 조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재범 우려가 없다"며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 바. 러·일 관계

### ● "러·일, 이달 말 에너지 지원 협의"(7/19)

- 러시아와 일본이 이달 말 모스크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LNG) 등을 일본에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아사



- 히신문이 19일 보도했음.
- 이는 이고리 세친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지난 3월 동일본대지진 직후 LNG와 전력 공급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열리는 것임. 전력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잉여 전력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홋카이도(北海道)에 공급한다는 계획임.
-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전력 부족을 걱정하는 일본은 화력발전소용 LNG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제안에 반색하면서도 자칫 '에너지 러시아 의존'이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 기 타

● EAS 외교장관 회의..미·러 첫 참여(7/22)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가 22일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장(BICC)에서 열림. 아세안+3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EAS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정치안보와 경제통상을 포함한 주요 동아시아 지역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임.
- 특히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식 참여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EAS 체제의 미래 운영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북한 박의춘 외무상은 이날 오전 마르띠 나팔르가와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동한 데 이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북·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음. 그러나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김성환 외교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회동은 23일로 연기됐음.

● < ARF 의장성명 한반도 관련 문구 >(7/23)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8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이 현지시각으로 23일 오후 9시에 공개됐음. 다음은 한반도 관련 의장성명 전문임.
- 2011년도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비공식 번역
- 7. 장관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를 환영하고, 동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장관들은 남북대화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유용한 여건 조성 노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일보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장관들은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회원국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또한 6자회담 재개에 유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8.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뿐 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에도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관들은 북한의 우리놈 농축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으로 하여금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장관들은 납치 및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9. 북한은 우리측 농축활동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대응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동 사안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 10. 반면, 일본은 동 사안은 미결 상태라고 언급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